第283回國會 (臨時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9年7月6日(月)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현안 보고
   가. 외교통상부 소관
2.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審査된案件

1. 현안 보고 ····· 1
   가. 외교통상부 소관
2.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25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학배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진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파견돼서 활동 중인 우리 국군 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이 오는 18일로 만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레바논 현지를 방문해서 동명부대의 활동상황을 직접 시찰하고 또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지에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레바논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오늘 모두 참석하셔서 이 파견연장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동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6월 28일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본 방문을 하셨는데 그 결과와 함께 또 7월 9일부터 시작되는, 이태리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 준비현황 등과 관련해서 외교통상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 보고

가. 외교통상부 소관

(10시22분)

○위원장 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상부 소관 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유명환 장관 나오셔서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통상부 소관 현안 중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 결과와 G8 정상회의 준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외교통상부 현안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6월 28일 일본 방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아소 총리의 방한에 대

한 답방 형식으로 6월 28일 당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을 갖고 북한 문제, 한일 경제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 간의 일정 이외에도 재일민단 간부와의 간담회, 한일 경제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일정 구성으로 의전과 형식보다는 실용과 성과에 중점을 둔 한일 간 셔틀 외교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금번 방일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엔안보리 결의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유도해 가기 위한 것이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창의적 접근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고 양 정상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 불참 시 5자협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부품·소재 분야 등 중소기업 간 산업협력 모멘텀 유지에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우리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일본 기업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원자력·과학기술·우주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합의하였으며 한일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상호이익이 균형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여수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일 청소년 교류 확대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사업, 취업관광사증 프로그램, 대학생 교류사업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젊은 세대 간의 교류 확대 방안 등의 검토를 위해서 한일 간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오는 9월 피츠버그에서 개최되는 제3차 G20 금융정상회의 준비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대아프간 및 파키스탄 공동지원 등에 있어서 양국 간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의 집행을 지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 이명박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 주요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G8 확대정상회의 준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일본 도야코 G8 확대정상회의 참석에 이어서 7월 9일~10일 양일 간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개최되는 G8 확대정상회의의 무역·기후변화·식량안보 세션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금번 G8 확대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인도·브라질·호주·인도네시아 등 모두 28개국, 11개 국제기구가 참석하며 무역을 포함한 세계경제, 기후변화, 식량안보, 개발 등 주요 지역이슈 등 국제정치 문제에 대해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9일 목요일 개최되는 무역 관련 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의 저지 그리고 WTO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진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연이어 개최되는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에서는 금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포스트(post) 2012'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계획입니다.

또한 7월 10일 금요일에 개최되는 식량안보회의에서는 식량안보에 대한 장단기 대응방안과 국제적 공조 제고 문제에 대해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G20 확대정상회의,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 등 세계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 회의에 대한 주도적 참여를 통해서 세계 금융·경제 위기,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해결에 기여해 왔습니다.

금번 G8 확대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무역·식량안보 분야 논의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외교통상부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장관께서 나오셔서 이번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G8 정상회의 준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박선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한미 원자력협정이 오는 2014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012년이면 우리 정부안을 가지고 외교통상부장관이 협정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장관께서 며칠 전에도 우리 한미 원자력협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956년에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한미협정이 체결이 됐고 72년에 민간이용에 관한 한미 원자력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일본과는 달리 농축하거나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모두 미국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20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재처리를 하지 못하고 농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 2016년이면 폐기장이 다 꽉 차게 돼서 어쩌면 우리는 t당 5000불씩 내고 프랑스나 일본에 가서 재처리를 해 와야 하는 이런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해서 핵주기를 완성하게 되었는가 하면 의회 정부 산업계 재계 학계 등이 아주 한마음 한 몸이 돼서 20년 동안 꾸준히 미국을 설득한 결과 오늘과 같이 비핵을 강하게 표방하면서도 핵주기를 완성해서 경제적인 이득도 취하고 있고 또 환경문제도 해결하는 나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아마도 세계 최강의 원자력 국가로 일본이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도 앞으로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바람직한 개정을 위해서 우리 외통위 안에 평화로운 원자력 이용에 관한 소위원회를 특별하게 구성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박선영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논의가 죽 있어 왔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주에 원자력연구원의 양명승 박사를 초청해서 우리 외교통상위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에 관한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주로 나온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핵 비확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불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IAEA를 비롯한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우리 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또 사용 후 핵연료의 재활용 문제 등을 포함해서 원자력 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들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전부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저희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 문제에 관해서 저 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교섭단체 간사님들을 포함한 소위를 구성하도록 결론을 냈습니다.

소위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께 일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외교전략 소위' 이렇게 가칭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국제협력과 외교전략을 위한 우리 국회 차원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소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진지하게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이회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會昌 委員 현안보고 1쪽에 보니까 '6자회담 틀 내에서 5자협의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해 놓고 '유엔안보리 결의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따라서' 운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재 결의를 한 유엔안보리 결의가 제재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이회창 위원

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엔안보리 제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것에 있어서는 전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재 국면 이후의 상황도 염두에 둔다는 뜻에서 그런 용어를 쓴 것입니다.

○李會昌 委員 그러면 그러한 제재 국면 이후의 처리도 목적이 되지만 그렇다고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제재 결의를 해 놓고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런 모순이 어디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은 관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會昌 委員 다음에, 지금 대통령께서 5자회담을 언급을 한 뒤에 5자회담 얘기가 나오다가 그 후에 슬그머니 5자협의로 바뀌었어요. 내 생각에는 5자회담과 5자협의는 의미가 다릅니다. 5자회담은 5자 당사국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담하는 것이고 5자협의는 물론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할 수도 있지만 각자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이 슬며시 바뀌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5자회담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6자회담에 대체하는, 6자회담이 아니고 5자회담으로 바꾸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5자회담이라는 것은 별도의 회담이 아니고 6자회담의 테두리 안에서 갖는 협의의 한 과정이다, 양자, 3자, 4자, 5자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오해를……

○李會昌 委員 그러면 5자회담 얘기 나올 때 처음부터 그런 개념이었다, 그것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李會昌 委員 그렇다면 5자회담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李會昌 委員 또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 말을 하셨는데 그 문구 내용도 '함께 논의한다' 해서 회담 형식을 강조했고 그 직후에 언론들이 일제히 5자회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만일 5자회담이 아니고 협의라면 바로 바로잡아야지 특히 외교부가 앞장서서 바로잡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자회담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봐요. 우선 중국이 북한을 빼는 5자끼리 회담에 응하겠습니까? 절대 응할 리가 없지.

지난번에 5개국 주한 대사들 모임에서도 대체로 5자회담에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 것으로 들었는데 이런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사전에 조정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李會昌 委員 지금 5자회담을 대통령이 제의한 다음에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5자회담 얘기가 나왔지만 오바마 미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대외적인 언급이 없고 제가 지난번에 청와대 회담에서는 얘기를 나누긴 나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5자회담을 한국의 정상이 제의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뒤 이어서 중국 측에서 5자회담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이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에 있어서 국가의 자존심이랄까 품격이 걸린 문제인데 저는 이것 매우 잘못된 것이다, 처음부터 5자회담이 아니고 협의의 문제였다면 그것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이 그 내용을 보시면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게 5자회담을 제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국내 언론의 보도 방향이 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언론을 상대로 곧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자회담을 마치 우리가 제의한 것 같은…… 그것은 5자협의의 필요성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李會昌 委員 5자회담이 나온 데 대해서 바로 이의 제기가 있었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거기에 대해서 외교안보수석이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바로 했습니다.

○李會昌 委員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직후에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李會昌 委員 직후에 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李會昌 委員 시간이 벌써 됐네.

좋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아까 이회창 총재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연결을 해서 외교부에서는 5자협의—지금 회담이 아니라 협의로 넘어가서—방식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 대 일, 예를 들어서 한일, 한미 혹은 미일 이런 식으로 각자 양자적인 방식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생각이 왜 나온 것이냐 하면 6자회담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북한을 뺀 5자 간의 공동된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6자회담에는 결코 못 나오겠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후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6자회담을 이끌어 나가는 문제를 5자가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제재 국면을 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북한 핵문제를……

○권영세 위원 지금 그 배경에 관한 말씀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프로세스지 언제 무슨 회담을 개최하자 이런 제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6자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면 양자, 3자, 4자, 5자가 만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5자가 전부 6자회담의 재개를 조속히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략을 협의하기 위해서 만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목적 시한을 두고 언제까지 하자 이런 구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렇다면 5자협의는 특별히 큰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6명이 만나던 6자회담에서 한 명이 빠져서 고집을 부리고 잘 안 나오니까, 그러면 5명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이 안 나온 회담의 의미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참석하는 회담이 돼야 이것이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꼭……

○권영세 위원 북한이 안 나오는 회담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요. 6자회담을 하자, 그러면 북한만 안 나오겠다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를 희망하는 5자가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를 조속히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권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남호에 뭐가 실려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가 실려 있다, 뭐가 실려 있을 것이라고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비공개 자리에서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다만 그것이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금지 품목이 실려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권영세 위원 지금 그러면 검색을 하지 않고 추적을 하다가 결국은 강남호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 정도면 충분히 제재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874호에 따른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권영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남호가 아니라 비행기에다가 싣고 미얀마를 향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현실적인 적절한 차단 수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세 위원 비행기를 이용한 수송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애초에 그것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요. 영공을 통과하는 국가가 그것에 대한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 할 의무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세 위원 영공은 PSI를 통해서도 되기는 되지요? PSI 방법 가지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그것은……

○권영세 위원 그런데 유엔안보리에는 비행기에 의한 수송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수단은 그렇게 언급을 안 했지만 정신에 따르면 모든 차단 활동에 협력을 해야 한다고……

○권영세 위원 지금 제재와 관련된 부분이 규정된 법을 해석할 때 그 정신만 가지고 영공 이외 지역, 그러니까 바다로 치면 공해에 대한 지역을 날아가는 비행기에 대해서 검색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관할 국이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위원 영공이 아닌 지역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그것은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통해서 그런 인터딕션(interdiction)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안보리에서 1874호를 작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미리 다 포함하는 것으로 했으면 왜 분명하게 박아 두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구 및 공항에서도 그것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권영세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다가 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인터딕션 원칙에 구체적으로 열거는 안 됐는데 여기 보면 '모든 회원국들이 항구 및 공항을 포함한 자국 영토 내에서의 자국의 국내법적 권한과 국제법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권영세 위원 지금 읽으신 것이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유엔 1874호의 제11항에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공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 시간 따로 주십시오.

○위원장 박진 예.

○송영선 위원 지난 4월 22일 우리가 FTA 비준 상정을 할 때 절차상에 3당 간사 합의에 의해서 비준을 위한 상정이 안 됐습니다. 때문에 반대하는 당도 있고 해서 3당 간사 합의에 의하지 않고도 결국 위원회에서 비준 상정이 통과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원칙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박선영 간사님이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원자력 소위 구성 제안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일, 시의 적절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3당 간사와 위원장 합의에 의해서 원자력 소위 구성을 하고 상임위에서 성실히 논의하겠다 했는데 저는 이것은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사도 없는 당에서는 이러한 소위가 구성이 되는지 사전에 논의가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또 간사가 없는 당이라도 이것이 위원회 전체의 중요한 문제라면 다같이 머릿수를 채우거나 안건을 내거나 협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일관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아침 이 제안을 하는 행정절차상에 이것은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때에 따라서는 3당 간사 합의에 의해서 되고 어떤 때는 3당 간사 합의가 없어도 필요에 의해서 되고 이런 절차상 일관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진 지금 송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월에 있었던 FTA 처리 문제는 분명

히 간사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표결 처리로 결정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간사 협의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아침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나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안은 우리 비교섭 위원님들께 충분히 고지되지 못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또 우리 간사 협의를 거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의 맥락을 봐 가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문제는 저한테 일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레바논 파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처음 이 레바논 파병이 논의될 때에, 12월 22일 논의될 때 외교통상부는 몇 명을 얘기하셨지요,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때 정확한 게 삼백……

○송영선 위원 350명이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350명인가 그랬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런데 350명인데 다시 2007년 7월 19일날 파견할 때에 실제로 몇 명을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게 아마 7명인가가 더 들어……

○송영선 위원 8명이 더 들어갔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8명, 그렇습니다.

○송영선 위원 8명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싹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1년 연장하는 동의안 때 저도 거기 특위에 앉아 있었습니다만 2008년 7월 16일 파견연장 요청 때에 350명이 명시가 안 되고 35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조항으로 350명 이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8명이 계속 운영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게 몇 명으로 늘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직 그것은 그대로 준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아, 그렇지 않지요.

참모장교 8명도 또 추가로 더 들어갔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옵서버 파견으로 명령 체계가 전혀 다른 그런 배석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옵서버 참여는 국회 동의 없이 죽 해 온 그런 기록이 다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러면 옵서버 파견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358명이 아니고 전번에 359명이었습니다. 통역관하고 테러팀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추가,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시면서 350명 이내라고 전번에 명시해 놓은 항을 수정하셔서 올렸습니까, 아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359명으로 지금 파견요청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350명 이내라고 처음에 해놓은 것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359명이라고 명시를 하신 거지요? 현원이 359명이니까 그냥 359명 하셨습니다.

'아, 위원님 9명 10명 5명 뭐 그리 차이가 있습니까?', 머릿수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전번에 작년 7월 16일날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견해가 나왔고 저도 같은 견해를 했는데 359명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의 경우에는 500명도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절차상으로 350명 이내라고 명시를 해 놨다가 이번에 추가 연장동의안에서 자연스럽게 359명으로 써 넣는 것은 최소한 사전에 어떤 조율이나 국회와의 협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내'라는 조항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답변을 하도록 시간을 잠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이것은 합참의 답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추가승인 요청은 외교통상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상세한 이유를 좀 설명……

○송영선 위원 이유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 2008년 7월 16일 때 분명히 350명 이내라는 조항을 추가로 붙였습니다. 명시를 했습니다. 파견부대를 운영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350명 이내라고 해 놓은 것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수정된 항목이 없이, 필요

성은 인정을 한다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맞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납득이 됩니다. 359명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도 되고 납득이 되지만 절차상 이것은 지적될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송영선 위원 왜냐하면 외교통상부가, 지나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방위비 분담 항목 변경이나 이런 것 할 때도 그때 충분히 당위성은 인정이 되는데 절차상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감사합니다.

○송영선 위원 그다음에 경비 보전이 이번에 MOU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저희가 알기로는 55% 정도,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기준이 우리가 생활수준, 급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송영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말리아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유엔 PKO 파병일 경우에는 경비 보전이 80% 이하가 없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런데 왜 이건 55%……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나라마다 일단 유엔의 저기에는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게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들은 거의 100% 보전이 되지만 우리는 자체 운영하는 경비와 우리 병사들 수준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유엔에서 보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영선 위원 시간이 됐으니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점점 더 보전액이 적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요. 우리 병사들의 수준을 높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송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한나라당의 서울 강동갑의 김충환 위원입니다.

최근에 보도되기를 우크라이나에 있는 무국적 고려인 문제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고 또 우리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이범관 위원님이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사실 좀 독특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 구비서류만 준비가 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변국가에 있는 무국적자 고려인들에게도 똑같은 방안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하고 있는 것이 각 지역의 실태조사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종료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 과정에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추방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 주시고 또 국적 회복 절차가 잘 하나의 사례로 만들어지고 또 러시아 내의, 구소련 내의 모든 한국 이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이범관 위원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애를 많이 쓰셨고 특히 장관님과 또 박노벽 대사, 여러 사람들의 노고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김충환 위원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그런 걸로 보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지침이 다 하달됐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말레이시아 쪽의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가 다 나왔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제가 미국과 말레이시아 양자 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관련 미국의 담당자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어쨌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

지 않는 한 핵에 필요한 자금, 자금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또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5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회담이냐 협의냐 하는 것은 물론 저는 그 자체보다도 이 5자가 통일된, 일치된 입장을 가지는 것이 이 북핵 문제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5자가 협의하는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히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없다면 북핵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님, 중국의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 다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절대로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동북아 평화 안정이 유지되도록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큰 점에서 한중 양국의 목적이 일치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중국은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북핵을 비핵화하는 문제보다는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뭐 일부에서는 그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중국의 입장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믿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실질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거나 또는 아니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다고 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한중 양국 간의 각종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미중 간에 협의를 하고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관계국 간에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이 그러한 국제사회에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데 동참을 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7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안보리나 G8에 제기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한국 정부와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지금 한미·한일 간에 협의를 진행시켜 가고 있고 이 문제는 곧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형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써는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특히 미국이 경제 제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또 PSI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다음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핵개발을 못 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견제장치 쉽게 말하면 에너지 공급 같은 것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외교부장관께서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현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국현입니다.

방일 중에 이 대통령께서 2016년 하계올림픽의 일본 유치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어느 정도까지 사실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올림픽 결정은 정부 간 기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IOC 위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한 적은 없지만 그런 의사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의……

○문국현 위원 그러나 우리나라의 후속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 문제는 뭐 외교적으로……

○문국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서로 그 영향에 대한 비교분석표를 하나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동명부대 파견 연장이 임박했는데요. 지난 5월 13일날 유엔에 이스라엘이 집속탄, 지

뢰에 해당하는 지도를 인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UNIFIL이 집속탄과 지뢰 제거작업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동명부대는 거기에 얼마나 참여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잠깐만……

지금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앞으로 1년 반 동안 일체 참여 안 하겠다고 여기서 서약하시는 건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까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만일에 1년 반 제안한 기간 중에 집속탄 제거, 지뢰 제거 업무에 한국군이 참여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국회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집속탄과 지뢰 제거는 전문적인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아마 부대편성에 대폭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과연 그러한 위험을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의 자녀들 359명에 대해서 허용할는지 이것을 꼭 자문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병력 규모가 참모진들까지 합하면 359명이 아니라 367명인데요. 이것을 현실화를 하실 생각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파견……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오, 그것은 앞서도 설명드렸지요. 과거에도 일곱 차례에 걸쳐서 2001년서부터……

○문국현 위원 그러나 왜 논쟁의 여지를……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오, 이것은 지휘체계가 전혀 다른 별도의 성격이기 때문에 동명부대에 포함시킬 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은 지휘 체계가 전혀 별도로, 개인 자격으로 개별적으로 파견되는, 배석이 되는 옵서버이기 때문에……

○문국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8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따로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동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가 파견이 될 경우에 한해서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게 헌법 60조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파견 기간을 지금 1년 6개월로 하셨는데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계획이 없이 지금 여야가 충돌하고 있고, 초당적 지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을 지금 이렇게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아무리 외교 쪽은 초당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해서 저도 들어왔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걸 6개월만 하시고, 어차피 회계 기간에 맞추는 것은 1년 6개월 돼서 맞추는 방법이 있고 6개월 돼서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6개월로 해서 회계기간을 맞추시고 그 다음번에 1년 단위로 연장하시는 것은 왜 생각을 안 하시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PKO라는 것이 우리가 국제기여, 외교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모든 국민이 다 동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그렇게 번거롭게 하기보다 일단 1년 6개월로 하는 것이 편하지 않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런데 편리성 때문에, 국회의 모든 절차들도 대개 1년 단위로 예산과 결산을 하는데 이 건에 한해서 지금 비상 시국하에 1년 반을 제안하시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 장관님이나 외통부나 국방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굳이 야당을 무시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야당을 무시한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요.

○문국현 위원 그리고 국회 예산이라든가 결산이 모두 1년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요번에 연장동의를 신청할 경우 한꺼번에 1년 반으로 하는 것이 좋지 또 6개월 해 놓고 금방 몇 달 후에 다시 또 연장동의를 하는 것이 절차상 번거롭지 않나 하는 그런 편리적인……

○문국현 위원 그러니까 법과 통상적인 관행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존중하셔야지 외통부의 편리를 위해서 결국 6개월로 하고 한 번 더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을, 또 지금 집속탄이라든가 중대한 지역에서의 임무 변경이 동명부대에는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UNIFIL 전체에는 생겨서, UNIFIL이 현재 사상자가 300명이 넘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12월

말까지 일단 6개월 연장하시고 그다음에 1년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NIFIL의 동명부대 파병연장은 여야가 다 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건의를 드린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예, 좀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집속탄과 지뢰 제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참여하시거나 그럴 때는 꼭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의사일정 상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이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가 끝나고 제 2안으로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한 장관 설명과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나중으로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남경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위원 예, 최근에 우리 장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개정을 통해서 경제적·상업적인 목적의 평화적인 핵 주권을 논의하는 것, 찾아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재활용 문제, 핵폐기물의 처리 문제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환경적으로도 큰 이득이 가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이 평화적 핵 주권을 군사적 핵 주권과 연계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평화적 핵 사용 요구일 뿐이지 군사적 핵 사용이 아님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천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도 최근에 평화적 원자력 이용 문제와 관련돼서 현재 핵심 핵 재처리 기술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을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이번에 장관께서 말씀하신 이런 평화적 이용과 관련돼서, 그 말씀에 이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기법이 전제가 된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용어를 저희들이 좀 구별해서 쓰는 게 파이로 프로세싱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리프로세싱 개념이 아니고 재활용이란, 리사이클링이란 개념으로 하는데요.

이 파이로 프로세싱의 경우는 그렇게 되면 우라늄과 초우라늄원소 등이 혼합된 핵연료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무기에 쓰일 수 있는 순수 플루토늄 추출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남경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장관께서 상정하고 이런 기술의 개발·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적 이용을 하는데 전혀 의심받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러면 이 기술에 대해서 지금 기술적인 공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개발을 더 해야 될 기술입니다.

○남경필 위원 그렇다면 현재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이 전제로 우리가 평화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것을 다 포함한 상업적인·평화적인 재처리 또 리사이클링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원칙적·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핵 주권론이 정치권 또 사회 일각에서 주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화적이긴 하지만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자칫 오비이락으로 비쳐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핵 개발해서 핵 주권론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남경필 위원님이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핵 비확산 관련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앞서 나가야 하는 반면 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국제사회의 오해를 없애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가면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북한의 핵개발과 이게 맞물려 가지고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러니까 전략적인 입장에서 봐서도 또 실제로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핵 주권론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실제적인 평화적인 핵 이용을 막는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우려를 저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지금 실제로 엘렌 타우쳐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무기소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 반대하고 있지요, 확실히?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분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런 언급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오바마 정부는 당연하고요, 중국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칫 평화적 핵 주권을 주장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까 말씀이 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 정부의 정확한 입장, 전혀 무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득시켜 나가고 또 관철시켜 나가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건 결국은 신뢰의 문제이고 또 미국과 일본 간의 원자력협정 개정 상황을 우리가 더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비확산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또 한미 간 뿐만 아니고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신뢰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한 강경 대응으로서 이 핵 주권론이 국익에 오히려 저해된다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예, 좀 전에 남경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일각에서 핵 주권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현 단계에서 핵 주권을 얘기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국제공조를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 주권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보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곧 사용 후 연료의 재활용 문제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뜻으로 읽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최근 미국 국무부는 2014년에 종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의 선언과 미국 국무부의 상반된 입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한 사람의 발언을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 한미 간에 협상이 개시가 되면 여러 가지 신뢰 관계 또 동맹 관계를 기초로 해 가지고 솔직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한 그러한 언급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그렇게 공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불란서, 심지어 북한은 습식 재처리를 하고 있지요,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윤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파이로 방식의 건식 재처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걸 포함해서였습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께서 좀 전에 건식 재처리가 리사이클링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파이로 방식은 순수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평화적 용도로 사용하는

한 NPT 체제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1992년도 한반도비핵화 선언에도 전혀 위배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윤상현 위원 그런데 미국이 장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파이로 방식에 대해서 작년 말까지 계속해서 파이로 방식은 리프로세싱, 재처리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가 작년 10월부터 파이로 방식이 재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미국의 달라진 입장을 감안해서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파이로 방식을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설득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한미 동맹 관계, 신뢰를 기초로 해서 많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일개인의 어떤 입장이 미국 정부의 공식된, 확인된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기 때문에 협상이 시작되면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다 종합해서 또 정부는 물론이고 학계, 언론계 또 산업계의 의견을 다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세월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의 파이로 방식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개발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파이로 프로세싱이 순수 플루토늄을 추출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인 검토하고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투명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978년도에 고리원자력발전소 설립 이전에 이미 1975년도에 불란서로부터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려고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또 우리가 1982년도에 플루토늄 추출 또 2000년도에 우라늄 농축의 분리실험에 대한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한국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적 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원전 보유국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전력 생산의 40% 가까이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고요. 현재 1만t의 폐기물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임시 저장시설에 놓고 있습니다마는 2016년도면 완전히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에너지 재활용 문제 또 폐기물의 처리 측면에서 핵폐기물을 반드시 재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륙붕 지형이라서 핵 쓰레기 보관 지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재처리해야 하고 재처리를 통해서 94.4%를 재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리사이클링, 파이로 방식의 기술 확보를 위해서 외교부에서 용의주도한 외교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용어를 하나 좀 개념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주권이라는 개념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개념은 다른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저는 핵주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것을 뜻하는지, 저 자신이 좀, 용어가 과연 법률적인 용어인지, 그냥 언론·신문 용어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도 좀 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핵주권이라는 말을 어떤 용도로,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 그래서 저희가 쓰는 용어를 저희들이 잘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핵주권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화적 주권 또 군사적인 주권 이것을 전부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이용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말하자면 핵에너지

그리고 기술개발, 경제적 이익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윤상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차원에서 장관께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로서는, 하여튼 외교부에서는 핵주권이라는 말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한나라당 정옥임 위원입니다.

지금 용어 사용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NPT상에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가 가질 수 있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에 대해서 보통 불가양의 권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맞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래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불가양의 권리다, 여기까지만 하고 핵주권이라든지 이러한 혼란을 주는 용어를 좀 자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관께서 평화적 핵 이용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라고 공개발언을 하시고 '원료의 공급이나 재처리 문제에 있어서 상업적 이익을 최대화해야 된다.'라고 교과서와 같이 정확한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것이 언론에 상당히 비약돼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재처리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러한 확대해석이 있는데 이것이 재처리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정옥임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바로 그러한 뜻에서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미국의 엘렌 타우셔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의 발언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기본의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을 반대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1992년에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재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92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원자력협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것은 개정이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2014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의 평화적인 상업적 이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에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여러 가지 분란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2014년에 협정이 완료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자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鄭玉任 委員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재처리라든지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한국에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러한 활동과 관련해서는 원천기술 보유국이며 공급국인 미국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뭐 거기에 재처리는 안 된다 이런 문구는 없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나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재활용 방법으로서의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은 재처리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원자력협력협정에 있어서 사용 후 핵연료의 형상 및 내용에 대한 화학적, 물질적 변경과 관련해서 소위 포괄적 동의를 얻겠다 이런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바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재처리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의 협력협정과 관련해서 그것을 개정해 가지고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이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의 형상 및 내용 변경과 관련한 포괄적 동의를 얻으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바로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협상에 상당히 정교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현재 협상을 담당할 부처는 어느 부처로 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일단 외교부가 주무를 맡되 관계부처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태스크포스도 있고 지금 외교부의 에너지자원대사가 나름대로 중추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의 1988년 미국과 일본 간의 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의 피눈물 나는 노력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일본의 경우는 십수 년 이상을 물밑에서 또 막후에서 협상을 하면서 다양한 쟁점과의 연계를 통해서 재처리와 관련한 포괄적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2014년에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태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되고, 외교부의 인력으로 볼 때도 더 많은 확충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확충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에너지담당대사로 하여금 전담을 시키도록 했고요. 또 관계부처하고 태스크포스를 좀더 보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가지고 가급적 금년 하반기부터 이런 협의가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지금 일본도 우리가 개정해야 될 시점에서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이 만료가 돼서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보니까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교섭을 7월 30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한일 간에도 그런 협조를 하기로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鄭玉任 委員 사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어떠한 기술을 도입하고 어떠한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고 원론적인, 총체적인 입장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보고를 주로 하셨는데 셔틀외교한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국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 핵 관련해서 일본과의 공조를 했다, 경제협조를 하기로 했다 이런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북핵 관련해서 일본과 공조한다는 것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일본에게만 좋은 일을 시키고 한반도 평화에는 상당히 어두운 그늘을 지울 수도 있다는 점이 반드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이 한일합방 100년입니다. 강제합방이었지요. 한일 강제합방 100년을 맞아서 지금 일본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정부, 학계 심지어 금융계까지 나서서 한일합방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어요. 지금 대통령이 여덟 번이나 일본의 정상을 만나면서 이런 우리 역사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를 단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는데, 교과서 왜곡이 일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에서도 있습니다. 다국적 출판사인 와즈워스 센게이지 러닝(Wadsworth Cengage learning)사의 세계사 교과서 장관님 보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못 봤습니다.

○박선영 위원 대한해협이 쓰시마해협으로 돼 있습니다.

다국적 출판사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는 영국, 미국, 호주, 브라질, 스페인, 싱가포르 심지어 일본에서까지 국제학교가 다 가르칩니다. 특히 세계사는 미국의 수능시험이라고 하는 SAT의 시험과목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셔널지오그래픽과 글랜코가 지난해 발행한 교과서에도 분명히 대한해협이 쓰시마해협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제주도가 일본 땅

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뉴욕이나 오하이오, 일리노이,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의 10개 주에서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은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상처를 덮어만 두고 있을 수 있는지 이제는 수술 매스를 잡아야 할 때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제기구 사령탑을 최근에 일본이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IAEA, 유네스코 그다음에 아시아개발은행 심지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도 일본 왕세자비의 아버지가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까지 제주도 동북방 한일 중간수역에서 하던 한일 해군의 수색구조 훈련을 왜 독도에서 합니까? 독도 앞바다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외교부장관이 모르시다니요? 한일 해군이 독도 해상에서 지금 이 순간,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수색구조 훈련을 합니다. 지금 여섯 번째인데요, 그 전에는 항상 제주도 동북방 한일 중간수역에서 하다가 왜 이렇게 외교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더구나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온 직후에 독도에서 하는지, 이제는 독도 수비까지 한일이 같이 합동으로 하실 겁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모르고 계시다니요. 그것 반드시 찾으셔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외교는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싼값에 들여오거나 확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원을 외국에 제값으로 팔고 그다음에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자원외교이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UAE에서 우리 T-50 어떻게 됐나요, 지금?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직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협상 중이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선영 위원 분명히 협상 중이에요, 끝난 것이 아니라. 우선협상 대상에서 빠졌을 뿐이지 협상 중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이탈리아의 M-346하고 아직도 경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총리는 왜 UAE 방문 계획을 2월 말 이후에 갑자기 취소했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최근에 총리께서 OECD 각료이사회 주재차 가는 길에 UAE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 했다가 일정이 변경된 것은 아마……

○박선영 위원 그렇지요? 일정이 변경됐어요.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비이락인지 아니면 총리의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우선협상 대상에서 T-50이 빠지자마자 출장계획 취소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래놓고 갑자기 원전 문제가 생기니까 부랴부랴 다시 출장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천박한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가지고 취소했다가 또 원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세우고 하는 이런 천박한 외교, 천박한 자원외교 이제 그만하세요. 외교부장관이 나서셔서 교통정리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범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님이 무국적 고려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독촉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무국적 고려인 문제를 지난 6월 25일 중앙일보가 톱기사로 보도를 하면서, 3회에 걸쳐 연재해서 그 실태와 대책을 보도한 기사를 장관님 보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봤습니다.

○이범관 위원 거기 대충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 어쨌든 무국적 불법체류 상태의 고려인 문제는 일제강점 이래 100년에 걸친 우리의 역사적 산물인 것은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는 대처해야 되고 지금 국가 위상으로 볼 때 50만 중에 5만이라고 추산되는 고려인의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태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주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래서 재외공관에 지시를 했고요, 우선 예산을 투입해서 실태조사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를 만나면서도 이 문제는 양국의 질서 회복 또 양국의 사회 치안유지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강하게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고려인으로 인해서 자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가 무지하고 경제적 약자 상태에서 버려진 이런 후손들에 대해서 거주국 정부의 법질서에 순응하도록 하는 과정을 잘 안내해 주고 또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데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오히려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무지하고 경제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거주지역의 국내법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이나 절차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번에 제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700만의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을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 영사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태 파악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이 주재국 재외공관의 외교관들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외교활동을 하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비롯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재외공관을 장관님께서 좀 격려해 주실 수 있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개성공단의 유 씨 억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통일부 소관으로 해서 개성공단 의제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개성공단 의제에서 남북이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 임대료, 임금, 주로 이것 협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통일부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먼저 선결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외교부는 참석하게 돼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직접 회담에 참석은 안 하지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안 돼 있지요?

또 북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관계부처 직원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외교력을 활동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 남북 간에 간헐적으로나마 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 입장은 이미 관계국에다 통보를 하고 특히 6자회담 참여국인 우리 주변국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중요성, 심각성을 리마인드하고 북한에 각종 경로를 통해서 조기 석방을 촉구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 성과가 어떤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 뚜렷하게 어떤 성과라고 말씀드릴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저는 여기에 외교부의 외교적 노력이 좀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외교부장관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있는데도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지, 지금 외교부는 손놓고 있는 것이냐, 개성공단 회담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억류 문제야말로 외교적인 문제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여태까지 외교부가 활동한 게 있으면 홍보를 잘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국과의 협조가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경향신문 오전 기사에 의하면 미국 중국 일본이 정기 협의체를 발족시키기로 해서 조만간, 이르면 이달 중에 첫 모임을 갖는

다……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봤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아직 언제 개최될지 뭐 그런 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래 전부터 미·중·일 간에도, 동북아에 있어서 관계국이야 뭐 한·중·일도 했고 또 미·중·일 또 여러 가지 그런, 한·미·일 또 이런 다중적인 차원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가 돼 가지고 그것이 1.5트랙 내지 정부 정책 협의 차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이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는 일체 논의의 대상으로 되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 중국 일본에 각각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을 했고 또 그쪽에서도 이것은 한반도와 관계없는 범세계적인 이슈가, 어젠다(agenda)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범관 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발족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계신 건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게 협의체라기보다는 우리가 한·중·일도 만나고 한·미·일도 만나는, 그래서 미·중·일도 만난다는 차원이고…… 다만 이것이 우리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러시아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이익에 손해가 간다 이런 차원에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이번 달 초에 미국의 골드버그 전 볼리비아 대사, 지금 대북 제재 TF팀장을 맡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골드버그 대사가 지금 중국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정진석 위원 부시 정부에서는 소위 크리스토퍼 힐 현 이라크 대사가 대북정책에 대한 전권을 행사해 오던 것에 비해서 이 오바마 미국의 신정부에서는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들이 상당히 널리 포진되어 있다 이런 인상을 좀 갖게 됩니다.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은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대사가 지금 특별대표로 되어 있고 6자회담 수석대표는 성 김 대북특사가 맡고 있고 또 동아태 담당 차관보 커트 캠벨이 전체적인 스크린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에 골드버그 대사가 또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대북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장관께서는 어떤 견해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캠벨 차관보가 인준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이런 라인업(lineup)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정진석 위원 골드버그 대사가 지금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소위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5자협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협조를 미국 입장에서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이미 미·중 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골드버그 대사는 제재, 유엔안보리 결의 제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조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정진석 위원 5자협의 문제는 미·중 간에 지금 구체적인 진전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구체적인 진전이라기보다는 그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진석 위원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께서 방미 전에 월스트리트저널하고의 회견에서 '5자협의'라는 표현을 쓰셨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정진석 위원 그래서 비롯됐는데, 어쨌든 이런 협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련 당사국과의 조율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런 징후나 그런 조짐들이 전혀 감지가 안 됐어요. 대통령의 외신과의 회견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아이디어는 외교부에서 인식의 틀을 쥐고 만들어 냈을 것인데 이게 지금…… 지금도 5자협의

는 그 성사를 위해서 진행형의 노력에 있지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하나의……

○정진석 위원 어쨌든 5자협의의 골자는, 핵심은 중국의 입장인데 중국이 빠진 5자협의라는 것은 상당히 무망한 것이고 그야말로 앙꼬 없는 찐빵 같은 것인데 중국이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데 5자협의가 진척이 되겠어요? 매우 무망한 제의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즉흥적이고 설익은 외교상품을 광고했다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한 꼴이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결국 스타일 구겼다, 대통령 스타일 구긴 것 아니냐,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 외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건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자학적인 측면에서 자꾸 강조할 게 아니고, 3자도 만날 수 있는 거고 5자도 만날 수 있는 필요성을 얘기한 거지 꼭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회담을 제의한 것도 아닌데 자꾸 이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부풀리는 건 합당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위원 지금 더 이상 5자협의 얘기는 정부에서 안 하고 있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 이것은 계속 앞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는 문제이고 또 중국과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한 과정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정진석 위원 제가 지금 신문 워딩을 보니까 지난 20일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치해서 5자회담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오바마 대통령과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렇게 여야 대표들에게도 설명을 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건 미국의 입장이나 우리의 입장이나 일본의 입장이나 러시아의 입장이 다 같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 치도 지금 진전된 게 없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진전이라는 건 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가지고 뭐,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때까지 안 하면 실패고 하면 성공 이런 의미가 아니란 거지요. 그건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자꾸 그렇게 하면 이게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신뢰가?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의한 것…… 모든 신문 보십시오. 5자협의가 1면 톱(top)으로 나왔는데 현 시점에서 5자협의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국은 그 문제를 우리보다 더 먼저 얘기를 했는데 미국 신문에는 그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너무 그렇게 강박관념으로 왜 5자협의를 하는데 당장 안 됐느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정진석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다……

○정진석 위원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함부로 국민들한테 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어젠더로 올려놓습니까? '되면 되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홍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욱 위원 오전에 이회창 위원님, 그리고 방금 전 정진석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5자협의에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제의하신 5자협의가 아주 충분한 타당성 있는 좋은 제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 때 5개국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반드시 생산적인 해법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련국들의 오해가 없게 형식과 내용상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설익은 채로 발표된 것에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공론화한 것이 아닌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이벤트에 쫓긴 건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처음부터 5자협의를 6자회담의 대체 제안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선행단계로 생각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저

는 그 주장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6자회담에 대한 언급은 한 차례밖에 없었고 또 방미 전에 월스트리트저널하고 대통령께서 인터뷰를 하신 것을 봐도 '6자회담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 그렇기 때문에 5개국이 어떤 방법을 도출해야 될지 일치된 견해를 찾을 필요가 있다'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미 양국 다 중국이 대북정책의 키를 쥐고 있다라고는 주장을 하지만 정작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만한 충분한 설득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5자협의를 공론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더욱더 진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미숙한 외교적 진행으로 대통령께서 모처럼 주도적으로 제안하신 대북정책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5자협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북한의 제재만 숙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산적인 해법을 모색해야지 만약에 제재만 논의한다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도 어렵고 중국을 동참시키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5자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이제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국면이 당분간 지속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제재로 끝날 것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서 그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로서는 5자 간이라도 만나서 그다음 단계를 논의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의를 한 거고 그 구상은 미국 일본 러시아 다들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사전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의 입장을 밝혔고, 이러한 협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공론화시킨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하나의 프로세스로 봐 주시면 큰 오해가 없을 텐데, 이것은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홍정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외교적인 어떤 매개를 제안할 때 공론화하기 전에 좀더 신중한 협의를 거쳐서 긍정적인 관련국들의 반응이 나왔으면 더욱 좋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경필 위원님, 윤상현 위원님, 정옥임 위원님 다 평화적 핵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같은 부분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평화적 핵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경제적인 관점 또 핵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서 국제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둘째 미국과 치밀하고 전략적인 물밑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한반도 핵문제에 국제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금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이, 그런 요란한 외교가 최선인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이 파이로 프로세싱(pyro processing)을 재활용보다는 재처리로 입장을 바꾼 듯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한 사람의 언급이 그 나라 정부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정욱 위원 미국이 그런 입장에 대한 한국 측 답변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장관께서 2일 하셨던 기자 브리핑은 파이로 프로세싱이 재처리가 아닌 재활용인 만큼 허용해야 된다는 우리 쪽의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봐도 좋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해야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홍정욱 위원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까지 2년 남았는데 현 시점에 대외적으로 공론화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제 곧 협상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또 국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됐기 때문에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홍정욱 위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필요한 평화적 핵사용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저는

조용한 외교, 독도외교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외교를 통한 신뢰를 구축하고 물밑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로 조용하고 끈질긴 외교가 필요한데 이 한반도 핵문제에 국제사회가 예민해 있는 지금 시점에 이것을 공론화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과 국제사회에 경계심을 늘리고, 될 가능성이 있는 평화적 핵사용의 가능성까지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존경하는 홍정욱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구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질문 안 하려고 다른 질문을 꺼냈다가 다시 할 수 없이 이 질문지를 꺼냈는데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과의 대화, 질의응답 때문에 다시 이 얘기를 외교부장관님께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자회담, 5자 협의체…… 이 말썽 많은 5자회담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조급성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6월 23일날 4개국 대사 초청 토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각국 대사의 발언록을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장관께서 이걸 참고하셔야 합니다.

5자회담에 대한 각국 대사들의 생각이 어떤지, 먼저 일본 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5자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자회담이 비핵화 목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 얘기를 끌어나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국 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개국의 이해 관심사를 조율하고 6개국을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우리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며 그만두겠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 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자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다자적 결정기구입니다. 이것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적인 문제—북한 핵 문제를 얘기합니다—를 해결하는 좋은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남경필 위원의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6자회담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저희는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중국·미국·일본·러시아가 6자회담 고수로 방향을 잡은 것이고 5자협의 제안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이전 6자회담 때 우리 장관께서 특별히 관심을 보이시고 또 참석을 하셔서 자료도 보시고 이러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외무장관회의 때문에 불참을 하셨지만, 이런 중요한 회담할 때 외무부에서 사람이 한 명 나와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패하는 정책이 계속 나오는 것이지요.

북한을 제외하고, 6자회담을 선회하는 사전적 협의체 구성에 어떤 나라도 지금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아까 우리 정진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아소 다로 총리나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했다는 직접적인 발언을 하신 게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내용은 없고 레토릭만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또 해당 정부 간에 명확한 합의점을 도출하지도 않았으면서 언론에 공개부터 됐던 것은 정말 정부에서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본 위원 생각에도, 각국 대사들의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보면 5자협의체는 이미 물 건너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계속 6자회담에, 물론 장관님 생각도 6자회담 안에 협의체로 5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언론이나 대통령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5자회담을 다시 새로 구축하겠다고 이해가 다 되도록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봐서도 사전적 또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조치 없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품격 있는 외교정책에 크게 손상을 입혔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런데 장관께서 지금 정진석 위원과 토론을

하시면서 '도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 5자회담에 대한 무슨 그게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관, 어떠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저도 답변을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밖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담을 제안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북한 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그냥 북한은 6자회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다들 5자, 북한 뺀 나머지가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제재국면 이후에 문제를 협의하려면 5자가 한꺼번에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랬고, 또 그 점에 대해서 미국이 강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했고 우리가 또 중국하고도 협의를 했고 러시아하고도 했고,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좀 신중한 입장이다 이러고, 지금 아직은 언 고잉(on going)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안 나오는데 5자만 모여서 무슨 회담을 합니까? 이것은 하나의 6자회담 틀 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하나의 모임으로서 해 보자 하는 그러한 하나의 아이디어로써 우리가 이끌어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구상찬 위원 장관님,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왜 그러면 상대국과 사전협의도 하지 않은 채 정상회담이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협의를 하고 있어요. 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에……

○구상찬 위원 장관님, 아까 우리 정진석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언론, 신문 스크랩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전부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의견 일치를 보았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전에 한·중 간에도 사전에 위성락 본부장이 중국으로 나가서 협의를 했고 이러한 의견 조율 과정에 있는 하나의 정부의 구상인데……

○구상찬 위원 장관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합의되지 않은 것을 대통령께서 아소 다로 총리나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를 했다고 직접적인 발언을 하셔서 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느냐는 것도 지적을 같이 하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을 왜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상찬 위원 아니지요. 합의되지도 않았는데 한국의 정상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한미 간에는 합의했고……

○구상찬 위원 일국의 정상이 얘기했는데 그쪽 양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대국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상외교의 틀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중국이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협의 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논란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구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금년 여름 지나기 전까지 뭐 되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구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委員 장관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중복되는 것을 피하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북한은 또 미사일을 7발을 쐈습니다. 요즘에 계속 미사일을 쏴 대고 또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1874호에 대해서는 펄펄 뛰면서 반대하면서 계속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는 유엔 제재결의안 다음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이런 도발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억제하겠나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정상께서도 특별히, 대통령께서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黃震夏 委員 그런데 이런 노력이 한국하고 미국, 또 한국하고 일본 간에는 됐는데, 중국이 매우 중요한 국가인데 언제쯤 이러한 긴밀한 협의를 정상 간에 하실 예정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앞으로 각종 다자적인 차원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아마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黃震夏 委員 예정된 일자가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한·중·일 정상회의도 있고 또 APEC도 있고 유엔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언제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유엔 제재결의안 1874호에 같이 동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제재결의안이지만 이것을 적극 동참하려면 중국에게 제재에 적극 동참하라고 하는 무슨 설득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중국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중국하고 러시아도 안보리 제재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점을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도 사람을 파견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고 또 미·중 간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층적인 그런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을 뺀 5자가 완전한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국 사정에 따라서 최대한 협조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현재까지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미국은 독자적으로라도 이런 제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여기저기서 우리가 관측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든지 일본 이런 나라들은 특별히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과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약속을 했고 앞으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동참시킬 수 있는 논리를 우리가 좀더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지요.

○黃震夏 委員 그다음에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핵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이든지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시기가 좋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엘렌 타우셔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 여기에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되면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해야 될 것인지, 아까 말씀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의견을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왜 평화적 이용이 중요하다 이것은 반드시 미국하고 합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특별히 외교부가 우리 정부가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논리야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이 20개 원자력발전소를 갖고 있고 제5대 원자력산업국이고 또 우리가 전기의 4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 기후변화대책이라든가 에너지절감대책으로 원자력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물리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연료가 포화 상태에 있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상업적·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마련하는 것은 한미 동맹관계에서도 매우 기초적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설득을 하고 우리나라의 비확산정책의 확고부동한 입장, 또 과거의 실적, IAEA를 통한 우리 발전소 감시, 또 협조 이런 완벽한 공조를 우리가 설명함으로써 그런 의구심을 없애는 또

신뢰관계를 우선 증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지금 제2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짤막하게 3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김충환 위원님.

○김충환 위원 북한이 핵개발하는 데 햇볕정책으로 13억 달러 내외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원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 토지 이용료를 5억 불 달라고 하고 또 임금을 5배로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하는데 돈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억 달러를 지금 달라고 하는데 뭐 하는데 쓰려고 달라고 하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그것은 통일부……

○김충환 위원 모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요, 통일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겠지만……

○김충환 위원 말씀하시기 힘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핵개발을 지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온 현금과 무기수출 불법적 활동으로 핵개발에 필요한 달러를 조달해 왔는데 이것을 지금 차단하지 않으면 핵 차단이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국으로부터도 식량과 에너지를 그동안도 지원받았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북핵을 차단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국제금융제재 또 PSI의 엄격한 실행 이런 것이고 중국으로부터는 지금 에너지 공급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핵우산 보장 또 전작권 이양 연기, 미사일협정 개정, 평화적 핵 이용 등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는 잘되고 있나 궁금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중국에 대해서는 5자협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회의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5자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어쨌든 국제사회가 북핵에 대한 불능화한다는 의지 또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를, 의견의 일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지금 말씀하신 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동시에 북핵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동북아 평화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하는 현실적인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중국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장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로 이범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해야겠는데요.

5자협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절대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5자회담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장관님? 안 그렇습니까? 북한을 제지하는 수단도 되고 다루는 하나의 지렛대가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외교적 망신이 될 일도 없고, 외교라는 게 우리가 창의적으로 시작해서 해 보는 거지요. 하다 안 되는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든 회담이 되든 문제는 그게 정부라고 모르고 시작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중국이 쉽게 응하겠습니까, 러시아가 쉽게 응하겠습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의견의 일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제가 이것도 사실 갖고는 와서 아까 질의를 안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도 2006년

7월 달 한겨레신문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했어요. '정부에서 5자회담을 추구하겠다' 그때도 이런 보도를 했어요, 대대적으로. 북한과 밀월관계를 하려고 했던 지난 정부도 지렛대로 5자회담을 사용해 달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못 돼서 그렇지 될 수만 있으면 북한을 고립하는데…… 우리만 고립될 게 아니잖아요. 북한이 우리 고립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도 뭔가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지요. 이런 데서는 절대 사기 떨어뜨리지 마시고 확실히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도 잘 설득을 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외교적 망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4국 대사들이 공개적인 석상에 나와서 6자회담을 하고 있는데 5자회담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놈의 책임 있는 발언을 하겠다고요.

또 언론이라는 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표현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외교,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것은 아까 여쭤 봤는데 '미·중·일 3국 협의체가 구성된다, 이것은 남북관계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에는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과연 미·중·일 3국이 모였을 때 남북관계가 대화의 대상이 안 되고 의제에 안 올라오겠는가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기서 약속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장관님이 하셨는데 확실하게 미·중·일—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의 진전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보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범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미·중·일 협의는 지금 날짜가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아마 당분간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외교통상부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2.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12시12분)

○위원장 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부를 대신하여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 안정화 및 중동지역 평화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파견되어 있는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 7월 19일부터 파견되어 2009년 7월 18일까지 연장되어 있는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09년 7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군부대의 임무는 안보리 결의 제1701호에 의거, 작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레바논군 협조 및 지원, 분쟁지역의 인도적 구호 등입니다.

셋째, 국군부대에 대한 지휘권 및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넷째, 국군부대의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는 우리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유엔으로부터 보전 받게 됩니다.

레바논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우리 국군부대는 파병 후 적극적인 임무수행으로 주둔지역의 안정화에 기여하여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사령부 및 레바논 정부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둔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건·인도 지원활동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으며 UNIFIL 사령부, 레바논 정부 및 주민 모두 우리 군의 지속 주둔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희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요약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이 2009년 7월 18일로 만료됨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헌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UNIFIL에 대한 국군부대의 파견은 지난 2006년 12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350명 규모의 국군부대를 1년 동안 UNIFIL에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동명부대를 창설하여 2007년 7월 19일 레바논 남부에 파견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7월 16일 국회는 제1차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을 심의하여 "국회가 승인한 인원을 초과하여 병력을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의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2009년 7월 18일까지 동명부대의 UNIFIL 파견 연장을 동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명부대의 파견기간 종료 시점인 2009년 7월 18일까지 위의 연장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 규정에 의한 국회의 파견동의가 없이 국군이 해외에 주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에 제출한 제2차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는 연장 동의안의 내용, 지난 2년간의 동명부대의 성과 및 부대의 안전 문제 등을 중심으로 파견 연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파견규모와 관련하여 2008년 7월에 제1차 파견연장 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 국회는 정부가 국회에서 당초 승인한 병력을 초과하여 운용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는 국회의 군대 파견 동의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기왕에 파견되어 있는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여 359명의 파견 연장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동명부대원을 교체하였으나 기존 359명 이외에 별도의 병력을 증원한 바는 없어 국회의 부대의견을 일응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9년 7월 1일 현재 레바논 현지에 있는 UNIFIL 사령부에도 참모장교로 8명의 한국군이 복무하고 있는바 이들을 합하여 계산할 경우 실제로 레바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국군은 총 367명에 이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이들은 동명부대 소속이 아니라 사령부에 파견된 인원이고 부대가 아닌 개별파견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참모장교의 최초 파견시점이 동명부대 파견이 결정된 이후인 2007년 1월이며 그 후 8명이 파견된 점과 이들 참모장교 역시 안보리 결의 1701호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활동이 동명부대의 임무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도 이들을 포함한 인원을 한국군의 파견부대병력 수로 발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8인의 참모장교를 동명부대의 총 파견인원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는 정부의 병력운용 정책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파견기간과 관련하여 정부는 파견 연장 기간을 2009년 7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제1차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 기한이 2009년 7월 18일로 되어 있어 1년 단위로 편성하는 정부예산 편성시점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파견 연장 시점을 회계연도와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 연장 시점과 회계연도 개시 시점이 달라 동명부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동티모르 파견의 경우에도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파견 연장을 인정하여 준 선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연장 동의안에서 1년 6개월의 파견 연장 기간을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동명부대 및 UNIFIL의 성과와 관련하여 2009년 3월에 발표된 제9차 유엔사무총장 이행평

가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2009년 2월까지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보이는 로켓발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이에 대항하여 로켓발사 지역에 대한 보복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UNIFIL이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명부대가 레바논에 파견된 이후 지난 2년 동안 동명부대 관할지역 내에서 교전이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완충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민사작전의 경우에도 현지 주민대표나 레바논 외교부 관계자의 발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지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인바 동명부대의 활동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군부대의 UNIFIL 파견 연장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재확인시키고 우리 군의 평화정착 및 재건 지원활동을 통해 주둔지역에 대한 기여와 레바논 지역의 안정화 및 중동 지역의 평화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대중동 외교의 거점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유엔 PKO 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정적 기여에 상응하는 병력 공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군부대의 UNIFIL에 대한 파견 연장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을 요약컨대 파견병력의 규모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동명부대와 UNIFIL의 활동 성과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국군부대의 UNIFIL에 대한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심의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참고로 오늘 국군부대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심사와 관련해서 국방부, 합참에서 네 분의 간부가 출석되어 있습니다.

우선 합참의 작전참모부장 육군소장 권혁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국방부의 국제정책차장이신 정연봉 육군준장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합참의 해외파병과장 육군대령 이형국 대령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국방부의 국제평화협력과장 유재익 육군대령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환 위원님!

○김충환 위원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연장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본 바와 같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있을 헤즈볼라의 움직임 등과 관련해서 우리 국군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적극적인 준비 또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국군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대체토론을 위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범관 위원님!

○이범관 위원 아까도 외교부장관님 상대로 얘기가 나왔는데 350명 동의를 받고 인원이 몇 명 늘었잖아요. 권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몇 명 늘어 가지고 그게 위법 문제가 있고, 지금 김충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여기에 우리 국군들이 파병됐을 때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참모부장 권혁순 최초 350명에서 9명 늘어난 이유는 아랍어 통역 인원하고 그다음에 군견 운용병 2명 그다음에 대테러 특전 임무를 수행하는 6명 해서 9명 늘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국회 동의에서 350명 이내라고 못 박아놨는데 왜 늘렸어요?

○합동참모본부작전참모부장 권혁순 최초에는 그렇게 됐지만 3진, 4진 갈 때 이미 국회에서 359명으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임무수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렇게 포함시켰습니다.

○이범관 위원 평화유지군의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참모부장 권혁순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부 티르지역은 특별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주요한 작전활동이나 민사작전, 기타 레바논군 지원 업무에서는 크게 우려할 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 마무리되셨습니까?

정진석 위원님!

○정진석 위원 권 부장님, 레바논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동명부대가 현지에서 교전을 벌인 사례가 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참모부장 권혁순 전혀 없습니다.

○정진석 위원 우리 병사가 전투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참모부장 권혁순 전혀 없습니다.

○정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저희 외통위원회에서 중동방문단을 구성해서 레바논 현지의 UNIFIL 사령부를 방문을 하고 동명부대의 군부대를 방문해서 직접 시찰과 또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대단히 사기가 높고 또 자기 임무에 대해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아주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군 평화유지활동이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지구촌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파견을 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평화유지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동의안이 상정이 된 것을 대단히 의미 깊게 생각을 하고 또 끝까지 남아서 대체토론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국방부와 합참에서 저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장시간 동안 기다려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권혁순 합참 작전참모부장 이하 간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정의화 위원님, 송영선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깊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 박선영 위원님, 정진석 위원님, 이범관 위원님, 김충환 위원님, 황진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셔서 답변을 해 주신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을 비롯한 외교통상부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구상찬	권영세	김충환	남경필
문국현	박선영	박 진	송영선
윤상현	이범관	이회창	정몽준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홍정욱
황진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 희 권
전문위원	허 영 호

○정부측 참석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
기획조정실장	임 재 홍
조정기획관	최 연 호
동북아시아국장	조 태 영
국제기구국장	신 동 익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정 연 봉
국제평화협력과장	유 재 익

합동참모본부

작전참모부장	권 혁 순
해외파병과장	이 형 국

【보고사항】

○의안 회부

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

(2009. 6. 12 이화수·김우남·손범규·김성조·홍장표·송훈석·박선영·강성천·정해걸·조원진 의원 발의)

6월 15일 회부됨

대형유통점 개설과 영업행위제한 등 국내규제를 포함한 WTO 수정양허안 제출 촉구 결의안

(2009. 6. 25 이시종·주승용·김낙성·조정식·임영호·정해걸·강창일·노영민·이종걸·김종률·유원일·유성엽·이춘석·변재일·김성곤·이용섭·오제세·이정희·강기갑·조승수·김재윤·강기정 의원 발의)

6월 26일 회부됨